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수정** · 김영***

◁ 요약 ▷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 즉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노동패널 2007년과 일본 JGSS 2006년 자료를 대상으로 서열 로짓분석을 실시해 빈곤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층가구에서도 성별, 연령, 학력, 고용지위와 같이 노동시장 관련 요인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지위와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취업 자체보다는 정규직 여부가 빈곤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족지위와 관련해서는 기혼, 소자녀일수록 빈곤위험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양국에서 혼인 자체가 지위재로 기능하고 소자녀는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인 것과도 연관된다. 셋째, 양국 모두 부모와의 동거, 부모소득에의 의존과 같이 부모자원의 가용성이 청년층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이 연구의 발견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어: 청년빈곤, 청년실업, 경제적 곤란, 빈곤요인, 성인기로의 이행, 주거분리, 실적관계, 기생독신, 부모자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KRF-2009-32A-B00115).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주저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ksujeong@dau.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borninsurge@pusan.ac.kr)

1. 서론

최근 독립적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경험하는 이행의 곤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고학력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교육문제로 교육은 일자리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부모 세대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 불안정 취업, 실망실업자로 내몰리는 현실은 현재의 경제적 소득감소를 넘어서 향후의 경력형성, 나아가 생애과정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불안정은 일차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와 관련된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노동력을 비정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대명사로 만들었다(우석훈·박권일, 2007; 남재량, 2006a). 뿐만 아니라, 신규졸업자의 고용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고졸뿐 아니라 대졸 노동시장도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다(이병희, 2003; 정인수 외, 2006; 김유선 외,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청년층의 ‘문제’는 비단 노동시장 진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악화된 노동시장 조건 때문에 청년층에서 독립적인 삶으로의 이행, 즉 주거독립, 혼인, 가족형성과 같은 후속과정에서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재생산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Shirahase, 2009; 酒井·樋口, 2005).

이 연구는 청년층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행의 곤란 중에서도 경제적 곤란, 즉 빈곤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청년층은 주요한 빈곤층이 아니었고, 빈곤정책은 주로 노인과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짧은 통과기간 정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청년기 ‘출발의 실패’는 이 시기의 경제적 불안, 독립연기,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에서 장기적인 ‘상처’효과(scar effect)를 남길 수 있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간격이 이행에서 양극화(youth divide)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부와 빈곤

이 대물림되는 닫힌 사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빈곤층의 속성 및 빈곤요인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시급하다.

한국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차단된 청년층이 급증하면 이슈화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과 생계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빚더미 청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한겨레, 2011. 6. 20). 일본 역시 1990년대의 장기불황 속에서 청년의 실업 및 비정규 고용 문제가 심각해졌고 2000년대에 들어 청년의 고용불안정과 사회적 배제의 현실은 ‘묻지 마 살인사건’으로 터져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¹⁾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내부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청년층이 경험하는 경제적 차원의 곤란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지만 정작 이 집단의 속성과 빈곤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의 빈곤원인을 탐구하는 본 연구는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청년층 빈곤 연구에 동아시아 사례를 포함, 확장시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비교연구는 단일사례 분석에서 얻을 수 없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에 대한 통찰을 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노동시장 경직 등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일본과의 비교는 한국 청년층 빈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빈곤 원인을 규명하는 실증연구는 한국 청년 빈곤문제에 대한 해법에서 대중적 처방이 아니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최근 일본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아키히바라 살인 사건(2008. 6. 8.)을 필두로 츠치우라(土浦) 사건(2008. 3. 23.), 도리테(取手) 사건(2010. 12. 10.), 야마구치(山口) 사건(2011. 2. 24.) 등 고립과 불안정을 견딜 수 없어 폭발하는 청년들에 의한 행인 무차별 살상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김영, 2011).

2. 기존 연구 검토

1) 유럽의 청년빈곤 연구

청년층의 빈곤원인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는 아직 미발달된 영역이지만(Iacovou, 2009) 최근 들어 유럽에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에서도 아동기로부터 성년기로의 이행은 점차 길어지고 연기되며 복잡해지는 특징을 띤다. 청년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졸업 후에도 직업 없이 지내는 기간도 상당 정도 길어지고 있으며, 고학력화로 인해 장기간 가족이나 국가에 의존하면서 독립을 연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Hammer 2003). 특히 주거비용이 높을 경우 경제적, 주거적 독립을 의미하는 성년기로의 이행문제가 가중되는데,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Fahmy, 2002, 2007).

유럽가구패널자료(ECHP)를 이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빈곤의 정도는 복지 레짐 별로 차이가 난다. Aassve et.al(2006)에 따르면, EU국가들에서 청년 빈곤율은 가족주의적인 남유럽국가군과 영국과 아일랜드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높다. 그러나 단일 국가 내에서도 청년빈곤의 정도는 큰 변이가 있는데 특히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저연령(16~19세) 청년층에서 빈곤율이 매우 높아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의 빈곤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빈곤적 특징이 있다(Cantillon and van den Bosch, 2003).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빈곤율은 20대 초반에 극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들의 빈곤은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영국과는 다른 이행의 계기에서 단기간,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²⁾

Kangas and Palme(2000)는 OECD 8개국의 생애주기별 빈곤(poverty cycle)을 분석하였다. 라운트리의 구분에 따라 생애주기를 청년기, 가족기, 빈 동지기, 노령기로 구분했을 때, 연금정책의 발달은 노령기의 빈곤위험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반면 청년기는 빈곤

2) 스웨덴 데이터는 다른 나라와 달리 18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험이 높은 시기로 새롭게 부상했는데,³⁾ 이들은 최근 청년층에서 빈곤율이 높아진 것이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Smeeding and Phillips(2002)는 LIS 데이터 중 7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청년빈곤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세 가지 요인, 즉 시장노동, 정부지원, 가족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이중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이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차이는 국가 간 차이(복지레짐 유형)보다 국가 내의 연령 및 성별 요인이 더 큰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남성은 시장노동을 통해 청년기 동안 경제적 독립을 향한 이행을 지속해가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행을 시작한 청년 여성의 궤적은 중도에서 정체되거나 중단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Iacovou and Berthoud(2001), Assve et.al(2002)는 ECHP를 이용하여 유럽의 청년층의 빈곤요인을 분석했는데 이들이 주목한 지점은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거쳐 가야 할 관문인 주거독립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들에 따르면 주거분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빈곤위험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Iacovou(2009)는 주거분리 초기 1~2년에 어려움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에서의 연구들은 국가간, 레짐간 비교의 틀에서 청년빈곤이 레짐 속 성과 같은 구조적 변수와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청년층 빈곤연구는 구미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분석자료 구축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빈곤 문제가 이들 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례에 대한 분석은 청년층 빈곤연구의 공간적 지평을 확대하는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세대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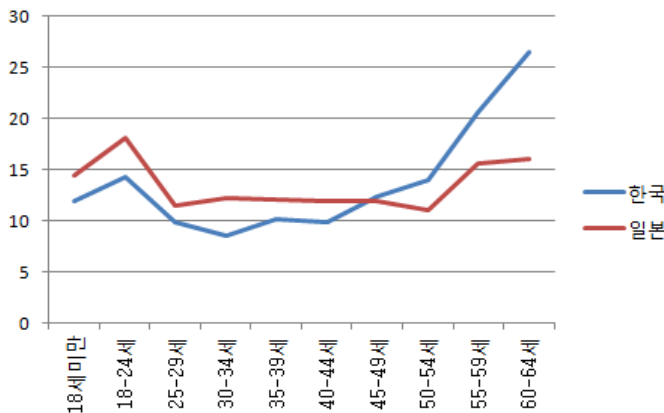
3) 가족정책이 미발달한 영미국가에서는 청년기보다 가족기에서 빈곤율이 높고, 다른 생애주기의 빈곤율이 모두 낮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이행의 시기인 청년기에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 빈곤 규모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 빈곤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규모 추정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빈곤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나가지 못한 상태이다. 먼저, 전체 가구빈곤율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의 차이가 크지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상대빈곤율(OECD기준)은 15~16% 수준으로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2006년 양국의 빈곤율은 한국 16.4%, 일본은 15.7%고, 3년 후인 2009년에는 양국 모두 빈곤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했는데, 한국은 16.8%, 일본은 16%이다.⁴⁾

[그림 1] 연령구간별 빈곤율(한국, 일본)

(단위: %)



자료: 일본 국민생활기초조사(2007), 한국 가계조사(2008).

주: 일본은 阿部 彩(2010)에서 재구성. 한국은 가계조사자료 필자 분석.

일본은 18세가 아니라 20세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전체 빈곤율 수준은 한국이 약간 더 높지만, 청년층 빈곤율은 일본이 더 높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양국 모두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18~24세에 봉우리가 형성되면서 빈곤율이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20~24세 청년층 빈곤율이 18.1%로 은퇴기인

4) 일본 빈곤율은 후생노동성 빈곤통계, 한국 빈곤율은 빈곤통계연보에 기초한 것임. 일본은 2006년 처음으로 공식빈곤율을 발표했는데, 2006년 일본의 상대빈곤율 15.7%는 OECD 국가중 멕시코(18.4%), 터키(17.5%), 미국(1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1억 중중류화사회'(all middle class society) 일본에 실제 상당한 정도의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가 존재함을 증명했다(산케이신문 産経新聞 2009.10.21.).

50대 후반의 빈곤율보다 더 높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시 18~24세 연령의 빈곤율이 14.3%로 50대 초반에 접어든 장년기의 빈곤위험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생애주기에서 돌출적으로 높은 청년층 빈곤의 ‘피크’ 혹은 ‘점프’ 현상은 최근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阿部, 2010)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초기청년기(20~24세)의 빈곤율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빈곤 ‘점프’ 현상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 20대 초반 초기청년층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동빈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안정성의 증가는 취업을 앞둔 18~24세 인구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빈곤율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김수정, 2010). 양국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빈곤율이 감소하긴 하지만, ‘독립적 성인’으로의 이행의 경제적 조건이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 빈곤요인

청년층의 빈곤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빈곤요인과 청년층의 빈곤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위, 혹은 빈곤/비빈곤을 설명하는 대표적 변수는 성별, 학력, 연령, 노동시장지위이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 고학력에 비해 저학력, 고연령일수록 빈곤 위험이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빈곤 위험이 높다. 이와 같은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외에 가족(가구) 수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가 빈곤 위험이 높다. 기존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청년층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빈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령효과와는 방향이 반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빈곤을 설명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청년층의 빈곤을 설명하는 분석틀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여러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학력변수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학력은 빈곤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이지만 최근 한일 청년층이 경험하는 학력관련 변화에는 특수한 점이 있다. 양국 모두 빠른 고학력화 현상을 경험했고 구미 국가에 비해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역설적

이게도 고졸자의 저학력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상대적 저학력자인 고졸층은 반복적 실업상황에 있거나(남재량, 2006b; 정인수 외 2006) 나쁜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김유선 외, 2009; 이병희, 2004; 이병희 외, 2010). 일본에서도 고졸자의 노동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1990년대 이래 학교-노동시장 이행시스템의 붕괴의 충격은 고졸 노동시장에서 가장 컸다. 일본에는 '실적관계'라고 하는 고등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school to work) 독특한 취업연결제도가 있어 오랜 기간 고졸자가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불황기를 통해 이 관행은 거의 붕괴된 상황이다(本田, 2005). '고졸 학력자의 빈곤화'라고 할 수 있을 이와 같은 변화는 양국에서 다른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둘째, 청년층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노동시장지위가 안정적인 청년층들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 부모의 경제적 지위의 직,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구미 국가들에 비해 보살핌 노동과 경제적 자원의 상호교환이라는 점에서 강한 세대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김수영, 2000).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에 불구하고 양국의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와 저성장기를 통해 미혼이더라도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규범이 상당 정도 확산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부모와의 거주지 분리는 결혼 이후라는 규범이 일반적이다. 1990년대 일본에서 취업한 미혼의 자녀 특히 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을 '기생 독신(parasite single)'이라고 칭하며 강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山田, 1999)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우리보다 분거 규범이 더 강하고 그런 한에서 우리보다 개인주의적 정서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최근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고용지위와 부모와의 동거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일수록 부모와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内閣府, 2003; 酒井·樋口, 2005; 小杉, 2010). 부모와의 동거가 증가하는 추세는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15~34세 청년층 중 부모와의 동거율이 증가하고 있고, 30대 초반에서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 부모와의 동거 증가에 대해서는 고용불안보다는 초혼연령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이병희 외,

2010: 156-164)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고용불안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출된 바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청년빈곤 원인과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함에도 이를 분석모델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독립을 한 청년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출생가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ECHP나 LIS 데이터를 이용하는 유럽의 연구자들 역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Iacovou, 2009).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에의 소득의존 변수를 대리 변수로 포함시켰다. 유럽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분리(leaving home)는 빈곤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거를 분리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고 주거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모와의 동거(주거의존)는 빈곤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소득의존은 해당 가구의 일차적 소득원이 부모인 경우로 정의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와 별도 가구를 형성했다고 할지라도 일차적 소득원이 부모인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일차적 소득원이 부모이며, 부모의 소득은 가족안전망으로 작동하면서 청년층의 빈곤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개인 수준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지위 변수를, 가족(가구)수준에서 혼인지위, 자녀수, 부모와 동거, 부모의 소득지원(부모가 일차적 소득원) 여부를 포함시켰다. 마지막 두 변수는 부모의 경제력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로 포함되었다.

3. 분석 자료 및 측정

1) 자료

먼저 청년층의 빈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자료가 필요하며,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으로 소속된 청년층에 대한 정보가 있어

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빈곤을 분석할 때 사용된 대표적인 자료들은 청년 가구원과 관련된 변수가 없어 이용에 난점이 있다.

먼저, 양국 정부가 공식 빈곤을 집계에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은 통계청의 가계조사, 일본은 국민생활기초조사(國民生活基礎調査)이다. 통계청 가계조사는 1998-2002년까지는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농림어업가구 제외)하여 대표성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조사 자료는 가구주가 아닌 청년층에 대한 정보에 한계를 갖는데, 가구원일 경우 성별, 연령, 근로 여부는 제공되지만 학력 및 소득관련변수가 없다. 한편, 일본의 국민생활기초조사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자료접근이 제한적이며 가구원 정보에서 학력, 고용지위와 같은 정보가 없다.⁵⁾

위 자료들이 가진 한계 때문에 청년빈곤층의 특성을 규명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대안적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자료로 한국의 노동패널(2007년)과 일본의 사회종합조사(JGSS, 2006년)을 사용한다. JGSS는 동아시아 사회조사(EASS)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 및 가구구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있고, 가구원의 성별, 연령, 학력 등 관련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과약을 목적으로 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JGSS에서 가구소득변수는 비교적 세분화된 구간(19개)으로 측정되지만 구간화되어 정확한 값을 알기 어렵다. 또, 가중 값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사례수가 4,200여 개에 불과해 청년층을 추출하면 사례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관련변수 및 자료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JGSS 자료가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일본 측 자료로 결정했다. 한국 측 자료인 노동패널은 세후 소득만을 측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일본과 매칭할 수 있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한국 측 데이터로 결정하였다.

5) 국민생활기초조사에 관한 개요, 설문지 등은 <http://www.mhlw.go.jp/toukei/list/20-21.html>를 참고하십시오. 한편, 일본의 전국가구소비실태조사(全國家口消費實態調査)도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구주의 경우에도 학력과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수가 공표되지 않아 빈곤분석에 사용되기 어렵다. 이에 비해 JGSS는 전국적 대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관련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이다.

2) 측정 및 분석방법

(1) 측정

분석대상은 20~34세의 청년층이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연령에 기반한 경우가 많지만 (16~25세 혹은 15-24세) 사회과학적으로 청년층(youth)을 정의하는 분명하고 합의된 기준은 없다. 산업화, 근대화, 탈산업화 등 사회변동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 청년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나 규범, 성년으로의 이행에 요구되는 과업 등은 다르게 정의된다. 20세기 중반에는 이 이행과정이 길지 않았고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면 완수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 이 이행과정은 연장되었고 성년기의 전통적 특징이 늦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30대 초반 혹은 그 이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관례를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한국과 일본에서 청년층의 독립이 연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 초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30대 초반에도 취업, 혼인을 하지 못한(혹은 미혼을 선택한) 청년 집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작하는 연령 시점 역시 통일된 것이 없지만, 고등교육이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18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일본자료는 연령을 5세 구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시작연령을 20세로 하였다.

20~34세 청년 집단에는 ‘고학력화’로 인해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집단이 포함된다. 학력 인플레이션, 졸업의 연기 자체가 은폐된 빈곤, 위장된 의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또, 25~34세 이상에는 대학졸업은 했지만 취업이나 가족형성을 연기하고 있는 집단도 있다. 이처럼 여러 복합성이 개진된 독립의 ‘장기 이행과정’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20~34세’ 연령을 청년층 빈곤의 분석 대상으로 하고 청년층 내부의 연령별 차이를 5세 구간으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청년층 빈곤원인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청년층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자료가 구간소득형태로만 소득을 제공하고 있어 빈곤선을 엄밀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응답소득을 상, 중, 하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 공공부조 등의 빈곤선은 빈곤 기준이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청년층 가구가 겪고 있는 빈곤을 포착하는데 무딜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빈곤/비빈곤의 구분보다 경제적 상층/중간층/하층이라는 구

분을 이용했다. 노동패널 역시 가구소득을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삼분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일본 JGSS 데이터는 가구의 세전 연간소득을 구간화한 응답소득을 사용하였고, 한국 노동패널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원별로 수입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이를 합산하여 연간소득을 구성하였다. 양국 모두 세전, 후 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 복지제도를 비롯한 소득재분배제도의 효과가 적고 세전, 세후 두 소득의 차이는 주로 노인층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용한 비교의 기준으로 JGSS의 세전 소득, 노동패널의 세후 소득 변수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구간소득은 2005년 전국가 구소비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소득 3분위선을 참조하여, 19개 소득구간 중 연간소득 '350만 엔 미만'을 '하', '350만 엔 이상~750만 엔 미만'을 '중', '750만 엔 이상'을 '상' 범주로 묶었다. 2006년 일본 4인 가구 기준 상대빈곤선(중위소득 60%) 값이 304만 엔이기 때문에, 소득구간 중 '250만 엔 이상~350만 엔' 이하 구간을 빈곤층으로 간주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연간 가구 총소득 3분위선을 기준으로 2440만 원과 4250만 원을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⁶⁾.

본 연구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수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 연령, 교육, 고용지위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가족(가구)수준의 변수로 혼인여부, 자녀수, 가구원수가 투입되었고,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대리변수로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에의 소득의존 여부가 사용되었다. 기존 빈곤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지역 변수도 포함되었다.

교육은 여러 구간으로 수준별 측정된 학력변수를 고졸 이하와 대졸로 구분하여, 이분 변수로 구성하였다. 현재 분석의 초점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화'로 인해 전체 연령 코호트 중 평균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다. 물론 중졸,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교육은 고졸 이하와 대졸자의 두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학력격차에 의한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구분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2년제 전문대학과 일본의 단기대학(短大)은 해당 표본의 수가 적어 별도의 범주로 구성하지 않고 대졸에 포함시켰다. 고용지위의 경우 정규직, 임시직(파견, 파트, 계약

6) 가구규모에 따른 가구소득차이는 분석에서 가구원수 변수를 통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추후의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보강하여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구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직 등), 무직으로 범주화하였다. 경영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범주가 있으나, 청년층의 특성상 표본수가 적어 정규직으로 포함시켰다⁷⁾.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빈곤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에도 주목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의 동거, 부모에의 소득의존(주된 소득원)을 알 수 있는 변수를 가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부모와의 동거는 가구원 가족관계 정보를 이용해 구축했고, 부모에의 소득의존은 가구의 주된 소득원, 생계책임자를 묻는 문항에 의해 구성했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거주지역은 일본과 한국을 한 가지 잣대로 나누기 어려운 변수이다. 일본자료는 지역의 규모에 대해 몇 가지 구분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거주지역의 명칭만을 대분류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자료는 7대 광역시와 각 도의 명칭을 통해 지역을 구분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7대 광역시를 대도시로 묶고 그 외 지역을 지방도시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일본자료에서 대도시는 삿포로, 센다이, 치바, 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기타큐슈, 후쿠오카, 사이타마, 사카이 지역을 의미한다(JGSS data codebook, 2006). 다른 지역은 20만 이상의 중소도시, 20만 이하의 도시, 정(町), 현(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국 자료의 구분이 7대 광역시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본 자료 역시 메트로폴리탄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종속변수가 서열화된 범주변수라는 점에서 서열화 로짓(Ordered Logit)을 적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소득범주를 상중하로 나누고 있어 종속변수가 순서가 있는 범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서열화 로짓 분석은 컷 포인트를 이용해 잠재변수를 추정하고 특정범주(이하)에 속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범주에 속할 확률보다 얼마나 큰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서열화 로짓 역시 로짓 분석과 마찬가지로 최대 우도법에 의해서 추정되고, 세 개 이상의 서열화된 범주를 갖고 있지만 이분 변수 형식의 로짓 분석과 해석방식

7) 자영업자의 소득분산이 큰데, 청년층의 경우 무직이나 임시직보다는 정규직에 가까운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규직에 포함시켰다(日本労働研究·研修機構의 수도권 청년조사(2006)에 따르면 자영업 청년의 소득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가깝다).

도 유사하다.⁸⁾

빈곤층 분석에는 주로 빈곤/비빈곤의 이분변수가 사용되고,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혹은 60%의 상대빈곤선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빈곤선을 청년층의 빈곤원인을 밝히는데 적용했을 경우 많은 집단들이 비빈곤으로 분류되어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는데 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층론에서 사용되는 가구소득분위에 따른 계층 구분방식을 가져와 느슨하게 빈곤을 정의하였다. 상중하 구분은 소득 10분위선을 기준으로 하층(1-3분위), 중간층(4-7분위), 상층(8-10분위)으로 구분하였다. 종속 변수를 상중하로 서열화시켰기 때문에 서열 로짓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 빈곤 여부를 설명하는 요인과 계층적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이원화시키지 않고 하층 대비 중층 및 상층, 중층 및 하층 대비 상층 간 차이에서 비례성(proportional odds)을 전제함으로써 빈곤/비빈곤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낳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4. 분석결과

1) 한일 청년층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대상 청년층의 평균연령은 양국 모두 청년층 연령구간의 중간 값인 28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한국의 경우 고졸 이하가 27.8%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는 청년층의 절반 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분포상의 차이는 ‘고학력화’가 정점에 달한 집단이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층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혼인지위의 경우, 한국의 미혼자 비율이 일본보다 약간 높지만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 양국 모두 청년층에서 미혼자와 기혼자의 비율은 6:4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역은, 한국의 경우 7대 광역시에 사는 비율이 높고, 일본은 대도시에 사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적다. 데이터 상의 거주지역 분류가 한국의 경우 지리적 분포

8) 서열화 로짓 분석에 대해서는 Greene(2003), Long(1997)의 7장을 참조하십시오.

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의 자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양국 도시규모의 수평비교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한국자료를 기준으로 대도시/중소도시 및 기타 지역으로 분류한 변수를 사용했는데, 한국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류기준의 한계 때문일 수 있으나, 한국 청년층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세, 명)

설명 변수		청년층(20-34세)	
		한국 (N=3128)	일본 (N=752)
성별	남성	48.0	46.7
	여성	52.0	53.3
연령		28.0	27.9
교육수준	고졸 이하	27.8	48.3
	대졸	72.2	51.7
혼인지위	미혼	59.2	56.1
	기혼	40.0	42.4
	이혼 사별 별거*	0.8	1.5
거주지역	대도시	52.8	20.9
	중소도시 기타	47.2	80.1
고용지위	정규직	48.9	55.3
	임시, 일용직	6.6	18.8
	무직 등	44.5	25.9
자녀수	없음	67.7	65.0
	1명	16.7	13.4
	2명 이상	15.6	21.6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52.0	41.4
	동거 안함	48.0	58.6
주된 소득원 (부모예외의 소득의존)	부모	21.9	11.1
	부모 아님	78.1	88.9
가구원수		3.5	3.6

* 이혼 별거 사별 범주는 분석 시 제외하였음.

고용지위를 살펴보면, 취업 청년층 비율은 일본이 높다. 한국의 경우 학업, 취업준비, 실업 등 사실상 실업상태인 청년층이 45%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26%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 학업기간의 장기화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 때문에 ‘스펙’을 늘리고 졸업을 연기하는 등 은폐된 실업을 포함하는 수치로 해석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임시,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보다 앞서 노동력의 비정규화가 진행되었고 장기불황 이후 노동력의 비정규화가 청년층에 집중된 일본 노동시장의 경험(김영, 2011)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가구)특성변수인 혼인여부, 자녀수 변수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비율이 더 높다. 한국의 미혼자 비중은 59.2%, 일본은 56.1%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가구 비율 역시 양국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층 응답자 중 한국은 67.7%, 일본은 65.0%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양국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는데, 한국은 절반을 상회하는 52.0%가, 일본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1.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변수인 주된 소득원 변수의 경우 한국의 경우 부모가 주된 소득원인 경우가 21.9%, 일본이 11.1%로 한국에서 부모소득에 의존하는 청년층이 많았다. 다른 성인가구와 달리 청년층 가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부모에의 의존(가능성)이 경제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규모를 보여주는 가구원수 변수에서 일본의 가구원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양국이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2) 빈곤요인 분석

[표 2]는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각 독립 변수들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서열화 로짓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간층 이상에 속할 가능성에 비해)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대 초반(기준변수)과 20대 후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30대 초반이 되어야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순으로 빈곤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위험이 더 낮다. 한국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상대적 유리함'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비롯해 한국 2,3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불리함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성의 효과는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2,30대 미혼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한 경우가 적고, 독립한 경우 동일 속성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을 가능성이 있다(김수정, 2010). 한편, 한국 남성들에게 20대는 군복무를 하는 시기인데 이 때문에 여성보다 늦게 취업한다. 여성들은 직업기대가 남성보다 낮아 빨리 취업하는 등 20대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유일한 연령구간이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성별 변수에서의 차이는 경제활동에서의 차이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학력은 고졸이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양국 모두 대졸자 수가 많은 고학력 사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졸은 인적자본이 부족한 '저학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대졸(고졸 대비)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 속할 확률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지위 변수의 경우, 정규직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임시직, 무직의 빈곤위험이 증가한다. 양국 모두 정규직과 임시직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추가검증을 했을 때 양국 모두 임시직과 무직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취업이 아니라 정규직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지위와 관련해, 양국 모두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양국 중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기혼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에게 혼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안정될 때까지 유예될 결정이거나 경제적 지위가 안정된 집단에겐 허락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은 것과도 연관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못한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 독자적인 가구를 형

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혼인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안정도 있겠지만, 혼인과 빈곤의 관계는 혼인자체가 지위재적 성격을 갖고 경제적 여력을 반영한다. 양국에서 나타나는 결과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부양부담을 보여주는 자녀수 변수는 양국 모두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아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빈곤위험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편, 부모와의 동거는 빈곤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는 독립에 수반되는 주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제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청년층에서는 빈곤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주거독립의 규범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초기 청년기부터 주거분리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Iacovou & Berthoud, 2001). 한국에서는 동거대비 비동거시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1.5배 증가했고, 일본은 3배 정도 높았다.

소득 측면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주된 소득이 부모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거 및 소득에서 부모의존 비율은 한국이 높고 일본이 낮는데, 일단 부모로부터 독립한 일본의 청년층들은 독립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위험의 형태로 치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독립시키는 한국과 독립의 연령규범이 강한 일본의 차이 효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영향력과 관련된 두 가지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20세에서 34세라는 비교적 넓게 정의된 청년층에서도 여전히 아동기처럼 부모의 자원(주거제공, 소득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 모두 얼어붙은 청년노동시장현실과 높은 주거비용을 고려할 때, 부모자원예의 의존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 빈곤의 ‘아동기적’ 특징이 초기 청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9) 본인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변수를 넣어 분석을 해보았을 때에도 양국 모두 청년가구주일수록 하층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표 2] 청년층의 소득계층과 관련요인 분석: 한일 비교¹⁰⁾

변수명 (기준범주)		청년층			
		한국		일본	
		coef.	P> Z	coef.	P> Z
연령 (20대 초반)	20대 후반	.152	0.130	.983	0.006
	30대 초반	.415	0.001	1.527	0.000
성별 (남성)	여성	.254	0.001	.128	0.611
학력 (고졸)	대졸	.894	0.000	.490	0.014
고용지위 (정규직)	임시직	-.701	0.000	-.859	0.018
	무직	-.869	0.000	-.858	0.003
혼인지위 (미혼)	기혼	.780	0.000	1.555	0.000
자녀수 (0명)	1명	-.329	0.027	-1.538	0.000
	2명 이상	-.946	0.000	-2.234	0.000
부모동거 (안 함)	동거	.419	0.011	1.185	0.019
부모소득의존 (안 함)	소득의존	.259	0.027	1.025	0.000
거주지역 (대도시)	지방도시	-.217	0.002	.137	0.600
가구원수		.675	0.000	.449	0.003
cut point_1		2.117		1.361	
cut point_2		3.877		4.678	
LR chi2(11)		703.2		122.3	
Pseudo R2		0.103		0.165	
N		3124		376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포함된 거주지역에서 결과는 한국에서 인구, 자본, 경제활동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소도시 청년은 광역시 지역의 청년에 비해 빈곤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기회 및 산업구조에서의 지역 간 불평등이 한국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브랜트 테스트를 통해 비례승산 검증을 했을 때 양국 모두 패러럴 회귀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트 테스트에 대해서는 Long(1997)을 참조하시오.

5. 토론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 빈곤요인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양국 모두 청년층에서도 인적 자본이 높을수록 (고학력, 정규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가족지위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무자녀(혹은 소자녀)일수록 빈곤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양국 모두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미시적 결정의 거시적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양국 모두에서 부모자원의 가용성은 빈곤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생가족 자원에 의존하여 경제적 불안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양국에서 청년층의 빈곤방어에 가족주의적인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독립을 연기하면서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화되고 있는 남유럽과도 유사성이 있는데, 청년층 빈곤에서 가족주의의 역할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흥미로운 차이도 있다. 우선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20대 초반과 후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고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한국적 특징은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더 탐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 변수의 경우 한국 청년층의 빈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지역격차 해소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알려준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사회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에서 고졸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졸은 고졸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 속할 확률이 2.5배 더 높다. 교육투자에서 배제된 고졸 청년들에서 빈곤위험이 높은 것은 소득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부족함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출생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빈곤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들은 상급학교진학에 진학하고 경제활동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보호를 연장해주는 가족 자원이 부족하고(이성균, 2009; 宮本, 2012)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을 때 최후의 피난처가 되

어주는 가족안전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졸자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정책적 장치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적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직업연계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재학 시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의 강화,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 직업상담기능 강화, 사회복지와 고용정책의 연계 등이 저학력 청년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왔다(김유선 외, 2009; 정인수, 2005; 전병유·이상일, 2003). 그러나 이 방법을 이미 실험한 유럽 국가들의 교훈은 실질적인 노동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계성 강화만으로 청년들을 지속가능한 노동계약에 통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결과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Walther and McNeish, 2003).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도 예외적으로 청년층 빈곤이 심각하지 않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예를 참조할 만하다(Iacovou, 2009). 독일, 오스트리아는 포괄적인 직업교육과 소득보장이 병행되는 도제시스템과 같은 제도적으로 순조로운 이행을 보장하는 학교-직장 이행시스템을 갖고 있다. 즉 단기적이고 직업입문에 국한된 직업연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애직업과정과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청년빈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학교-직업 이행구조는 이들 조정자본주의 경제의 유기적 일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수준에서 다른 나라에 도입,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부모의 지원은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기 삶의 안전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에 의존하고 가족의존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정책유인은 당장의 빈곤은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인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이를 다음 세대로 이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청년기 이행의 성공적 결과인 ‘독립’은 단기적인 빈곤/비빈곤의 차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것이므로, 청년기의 빈곤해소 역시 근시안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년층의 빈곤위험을 낮추기 위해 현금급여의 대상을 청년층 가구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년층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일정 연령 이하로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는 제한적 기본소득(basic income) 지급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경제적 긴박성 때문에 서둘러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자리에 들어갔다 단기간에 이직하

고 마는 소진적인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생애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청년층은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순탄치 않은 여정에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청년실업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문제가 의제화되었지만, 실업문제를 넘어 현재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난관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첫걸음으로 청년기에 경험하는 경제적 자원의 빈곤문제를 제기하고 청년층 내부의 차이를 통해 그 요인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본 연구는 청년층 빈곤에 대한 연구가 빈곤규모 측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비교를 시도한 의의를 갖고 있으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가족)요인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일본 자료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소득변수를 엄밀하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는데, 적절한 변수와 자료를 보강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층의 빈곤을 비교연구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며, 빈곤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국가의 특수성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수영 (2000).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과 가족: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유선, 권혜자, 김종진, 이명규 (2009).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고용정보원.
- 김영 (2011). “녹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취업상황”, 한림일본학, 18, 121-153.
- 남재량 (2006a).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2. 제 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40-157.
- _____ (2006b).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16, 22-33.
-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이병희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04).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고용 없는 성장기의 청년실업 해법 토론회 자료집.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실태.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자료집, 569-581.
- 전병유, 이상일 (2003).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2005). “선진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3(2): 69-73.
- 정인수, 남재량, 이승우 (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겨레21 (2011). “참을 수 없는 등록금의 무거움”, (2011. 6. 20. 제865호).
- 宮本みち子 (2012). 若者が無縁かする：仕事・福祉・コミュニティでつなく. 筑摩書房.
- 本田由紀 (2005). 若者と仕事.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山田昌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筑摩書房.
- 小杉礼子 (2010). “若い女性の職業キャリアと貧困問題”. 生活困難を抱える男女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18-36.
- 阿部彩 (2010). “日本の貧困の動向と社会経済階層による健康格差の状況”. 生活困難を抱える男女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37-55.
- 日本労働研究・研修機構 (2006). 大都市の若者の就業行動と移行過程.
- 内閣府 (2003) 平成15年版 国民生活白書.

酒井正・樋口美雄 (2005). “フリーターのその後: 就業・所得・結婚・出産”. 日本労働研究雑誌, 535: 29-41.

産経新聞 (2009). “貧困率19年は15.7% 世界ワースト4位”, (2009. 10. 21.).

Aassve, A., Iacovou, M. & Mencarini, 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5(2), 21-50.

Aassve A, Billari F.C., Mazzuco, S. & Ongaro, F. (2002). Leaving home: a comparative analysis of ECHP dat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4), 259-275.

Cantillon, B. & Van Den Bosch, K. (2003). *Social policy strategies to combat income poverty of children and families in Europ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working paper no. 336).

Fahmy, E. (2002).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Working Paper 27, Townsend Centre for International Poverty Research, University of Bristol.

_____ (2007). *Poverty and youth transitions in Europe: an analysi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ousehold panel* in H.Colley, P. Boetzelen, B. Hoskins and T. Prvera, *Social inclusion and young people: breaking down the barrier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Greene, W.H.(2003). *Econometric analysis* (fifth edition). Prentice Hall.

Hammer, T.(2003). *You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Press.

Iacovou, M.(2009). Cross-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with longitudinal data: research into youth poverty. *Twenty-First Century Society: Journal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4(2), 149-160.

Iacovou, M. & Berthoud R. (2001). *Young people's lives: a map of Europe*. 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Kangas, O. & Palme, J. (2000). “Does social policy matter? poverty cycles in the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0, 335-52.

Long, J.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age Publication.

Shirahase, S. (2009). Age, change and poverty: coping with social transformation. *Global Asia* 4(1),40-44.

Smeeding, T. & Phillips, K. (2002).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employment and economic sufficien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 103- 133.

Walther, A. & McNeish, W. (2003). *Young people and contradiction of inclusion: toward integrated transition policies in Europe*. Policy Press, Bristol, United Kingdom.

A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Youth Poverty in Japan and Korea

Kim Sujeong*, Kim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economic insecurity and poverty of the youth in Korea and Japan. This study carried out ordered logit analys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poverty in both countries, using the data such as JGSS and KLIPS.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verty risk is unequally distributed among the youth. Young, less educated(high school graduates), and temporary, without work groups are more vulnerable to poverty. Especially, high schoolers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Also, regular employment rather than the employment itself is likely to increase economic security in both countries. Second, in terms of family status, the married is less likely to be poor than the never-married, implicating the marriage functions as a positional goods in both countries. No kids enjoys relatively secure economic status, reflecting carrying less family care burden. Lastly, availability of parent resource like housing and income lowers the economic risks among the youth. In Japan these parent effects are bigger than Korea.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conclusion.

Key Words: youth poverty, youth unemployment, economic insecurity, causes of poverty, transition to adulthood, leaving home, school to work system, parasite single, parent resource

◆ 2013.02.18. 접수 / 2013.03.20. 1차 수정 / 2013.03.28. 게재 확정

* Associate Professor, Dong-A University(ksujeong@dau.ac.kr)

** Associate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borninsurge@pusan.ac.kr)